

한빛원전 1·2·3호기 폐쇄 다가온다

1호기 5년·2호기 6년 남아...3호기도 2034년에 폐쇄 전남도·영광군 지역경제 영향 우려 속 대책 마련 나서

정부의 탈(脫) 원전 로드맵에 따라 한빛원전 1호기가 5년 뒤면 폐쇄된다. 나머지 2·3호기도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는 2034년까지 가동을 멈춘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빛원전 폐쇄(廢爐)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광군과 전남도 등은 폐쇄로 인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 폐쇄 5년 남았다=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는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현재 25기인 발전소 수를 오는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으로, 안정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빛원전은 1호기가 2025년 전력 공급설비에서 제외된다.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폐쇄, 3호기는 2034년에 폐쇄하는 것을 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 담았다.

산업부가 2017년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년)에 견주면 한빛 3호기 폐쇄 계획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기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빛원전 3호기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1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이래 벌써 2년째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빛 4호

기(2017년 5월 18일 가동 멈춤)도 멈춰 선 지 벌써 1000일을 훌쩍 넘기면서 가동을 멈춘 노후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수 밖에 없다.

○지역경제 어찌나=지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원전 폐쇄 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영광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하다. 한빛원전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만 2659억(2013~2017년)에 달하고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 사업지원금(2017년 기준)도 영광군 세입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빛 3·4호기 가동이 오랫동안 멈추면서 매달 원전세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에만 442억원의 원전세를 냈지만 지난해는 236억원만 냈다. 올해 3·4호기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200억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폐쇄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영광군은 지난 8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도로 한빛원전 1·2호기 폐쇄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명회를 갖고 원전 폐쇄 부지에 ▲기능적 테마시설 안전체험시설 ▲폐로 관련 교육·연구시설 등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광군은 또 원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발전소 내 보관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사용후핵연료(지방세)를 부과해 지역발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개혁지역', '원전해체전략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상도 논의했다.

한편,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20년 46.3%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석탄발전의 설비 용량을 2034년까지 24.8%로 줄이고 현재 15.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4년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빛원전 전경.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2025년 폐쇄를 앞둔 1호기, 두번째가 2호기, 세번째가 3호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민 때린 고교 체육특기생 퇴학은 부당”

20대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고교 체육특기생을 퇴학처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퇴학당한 A씨가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고교 3학년생이던 지난 2018년

6월 새벽, 목포에서 지나가던 20대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는데 불복,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남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A씨는 이후 해당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퇴학처분의 요건을 감안, 학교측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 일탈·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의 경우 '품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 행위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학 처분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A씨 비행이 고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으로 학교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관계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빠 찬스’와 ‘삼촌 찬스’, ‘남친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장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와 지인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 비밀침해 등) 등으로 병원 직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지인 등의 채용 과정에 개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장과 총무과장이 각각 자기 아들을 병원엔 취업시키면서 서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최고 점수를 주는 ‘품앗이 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사무국장의 조카와 아들, 심지어 이들의 여자친구까지 합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합격자 10명 중 전남대병원 실습 경력자 없던 사람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등 2명뿐이었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국정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 채용 과정에 관련한 혐의를 확인,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병원 사무국장이 사망하기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무국장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합격이 취소됐고 병원측은 교육부 요청으로 관련자 2명을 중징계했고 경징계(1명)와 경고(1명) 처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충선 후보 출판기념회 관광버스로 참석자 동원 60대 벌금형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를 빌려 참석자를 실어나른 60대 봉사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5년 간 선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택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봉사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선거구인 22명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장까지 실어나른 등 관광버스를 빌려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입후보자 문자메시지를 받고 시내 2시간 운행을 조건으로 관광버스 1대를 15만 원에 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동기와 관련 “A씨는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을 동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향후 자신이 운영 하는 봉사 단체가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현금이나 물건이 아닌 교통편의 제공으로 그 이익의 가액 자체도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로 지목된 A(24)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광형집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